

국제법

문 1. 국제법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가, 국제기구,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 실체가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 ㄴ. 국제기구는 그 국제기구를 설립한 국가들이 설립조약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 외에 다른 권한을 가질 수 없다.
- ㄷ. 개인은 제한적으로 국제법상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ㄹ. 국가연합의 구성국들은 국제법상의 주체성이 국가연합에 흡수되므로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가 아니다.
- ㅁ. 모든 인민(peoples)은 자결권을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ㄱ, ㄴ, ㅁ
-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강행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노예매매, 집단살해, 테러금지, 일반적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은 강행규범으로 인정되고 있다.
- ㄴ. 조약은 체결 당시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 무효이다.
- ㄷ.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강행규범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 ㄹ.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없었으나 그 후에 출현한 새로운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 ㅁ. 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 ① ㄱ, ㄷ ② ㄹ, ㅁ ③ ㄱ, ㄷ, ㄹ
- ④ ㄱ, ㄹ, ㅁ ⑤ ㄴ, ㄹ, ㅁ

문 3. 국가의 관할권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속지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범죄자·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속인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민이 자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수동적 속인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효과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범죄가 외국인에 의해 외국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보편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이 자국의 고유한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외국인의 국적 및 행위지를 불문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4. 국제법상의 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새로 독립한 정치적 실체가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기존 국가들로부터 국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정부변경시 신정부가 그 국가의 정식의 국제적 대표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로부터 정부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 ③ 선언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승인이 없이도 국제법상 국가가 성립될 수 있다.
- ④ 반관단체는 교전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으면 국제인도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⑤ 어떠한 정치적 실체가 영토, 국민, 정부 등 국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으로부터 국가승인을 얻지 못하면 일반국제법상의 여하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 못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문 5. 국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로서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자결권의 행사로 국가가 분리독립되어 새로운 국가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국가가 UN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평화애호국이어야 한다.
- ④ 국가가 아닌 실체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다.
- ⑤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도 UN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문 6.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UN헌장은 전쟁을 포함한 일체의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② UN헌장은 무력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 자위권을 인정하면서 그 행사를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 ③ 무력복구는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더 이상 합법적인 수단이 아니다.
- ④ UN헌장은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제7장에서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⑤ 강제조치는 평화의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가 존재한다고 UN 총회가 결정한 경우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할 수 있다.

문 7. UN헌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회원국의 헌장상 의무와 회원국의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 ㄴ. UN헌장에는 국제연맹규약과 달리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ㄷ. UN헌장은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을 제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에서 규정하고 있다.
- ㄹ.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의 당사국은 UN의 기관에 대해 그 조약을 원용할 수 없다.
- ㅁ. 정지된 회원국의 특권과 권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 ④ ㄱ, ㄹ, ㅁ ⑤ ㄴ, ㄹ, ㅁ

문 8. 국제사법재판소(ICJ)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안전보장이사회와 ICJ에 모두 회부된 분쟁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분쟁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ICJ는 그 분쟁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아니한다.
-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ICJ에 회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ICJ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당사자 각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잠정조치를 제시할 수 있으며 ICJ가 제시한 잠정조치는 당사자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통지된다.
- ④ ICJ 재판관의 선거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간에 구별 없이 이루어진다.
- ⑤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ICJ에 요청할 수 있다.

문 9. UN 총회의 표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표결은 재적 회원국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한다.
- ② 중요문제를 추가하기로 하는 결정에는 중요문제에 관한 표결규칙이 적용된다.
- ③ 예산문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④ 국가의 UN 가입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⑤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은 재적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문 10.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전권위임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외교공관장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ㄴ. 국제회의에 파견된 대표가 그 국제회의에서 조약문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여야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ㄷ.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ㄹ. 법무부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문 11.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ICC 로마규정은 전쟁범죄, 침략범죄, 마약범죄 및 테러범죄를 관할범죄로 정하고 있다.
- ② ICC는 관할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 또는 그 범죄 혐의자의 국적국이 당사국이거나 ICC의 관할권을 수락하였다면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ICC는 관할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 관련 사태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소추관에게 회부된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특정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국가가 이를 수사하고 있더라도 그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ICC는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ICC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 12. 영토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무주지에 대해서는 발견만으로도 완전한 권원을 취득한다.
- ② 오늘날에도 정복은 영토 취득의 권원으로 인정된다.
- ③ 선점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지배만으로 충분하며, 영유의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 ④ 무주지는 가장 인접한 국가에게 우선적으로 영유권이 인정된다.
- ⑤ 선점과 시효에 의한 영토 취득은 모두 실효적 지배를 요건으로 한다.

문 13. 영해상의 외국 선박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륙국의 선박도 타국 영해상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 ② 외국 선박이 영해상에서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무해통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결과가 자국에 미치는 경우 해당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그 선박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외국 군함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준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연안국은 그 군함에 대하여 영해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문 14.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든 UN 회원국은 ICJ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

ㄴ. ICJ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각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ㄷ. 권고적 의견 부여 절차와 달리 쟁송사건에서는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ㄹ. UN 전문기구는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ㅁ. 사건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송에 참가한 국가는 ICJ의 판결에 구속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15.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기구의 설립문서가 되는 조약이나 국제기구 내에서 채택되는 조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국가 간의 조약에 적용된다.
- ③ 국가승계, 국가책임, 국가 간의 적대행위의 발발로부터 조약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단하지 아니한다.
- ④ 원칙적으로 이 협약 발효 후 당사국이 체결한 조약에 대해서 적용된다.
- ⑤ 서면의 형식으로 된 조약에 적용된다.

문 16.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UN헌장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원국이 총회의 주의를 환기한 분쟁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어떠한 토의도 하지 아니한다.
- ②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자인 분쟁에 관하여 현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 의무를 미리 수락하는 경우 그 분쟁에 관하여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③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심의 중인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분쟁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토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 ④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국제분쟁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적절한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안전보장이사회가 법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도록 권고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분쟁의 당사자인 이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문 17.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판관이 소송당사자의 국민인 경우 동 재판관은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ㄴ. 판결에는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성명이 포함되지 않는다.
 ㄷ. 재판관은 9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ㄹ. 재판관은 이전에 그가 변호인으로 관여하였던 사건의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
 ㅁ.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18. 국제적 분쟁의 해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상적으로 교섭은 제3자가 개입하는 다른 분쟁해결 방법이 사용되기 전에 분쟁해결의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이 사용된다.
- ②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분쟁해결 방법으로 교섭을 규정하고 있다.
- ③ UN헌장은 평화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사실심사를 명시하고 있다.
- ④ 중개는 제3자가 분쟁당사국들의 동의에 따라 분쟁당사국들의 교섭에 적극 참여하여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쟁해결 방법이다.

- ⑤ 조정은 제3자가 분쟁당사국들의 동의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당사국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쟁해결 방법이다.

문 19.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ICJ 판례에 의함)

- ① UN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ICJ규정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② UN 총회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절대다수표를 얻은 ICJ 재판관 후보자는 당선된 것으로 본다.
- ③ ICJ 절차에서 임시재판관(ad hoc Judge)의 지명은 쟁송사건의 소재관부에서도 인정된다.
- ④ ICJ규정에 따른 잠정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 ⑤ ICJ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사안이 특정 국가와 관련되는 사안에서 해당 국가의 동의가 없는 데도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였다.

문 20.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상소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WTO 분쟁해결제도의 상소절차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중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 ②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상설기구이고, 그 위원은 4년 임기이며 연임이 불가하다.
- ③ 원칙적으로 분쟁당사자가 상소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구가 자신의 보고서를 배포하는 날까지의 절차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분쟁당사자인 회원국의 상소기구위원도 해당 분쟁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 ⑤ 상소기구는 패널의 법적 해석이나 결론을 확정,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으며, 상소기구의 심의과정과 개별 위원들의 의견은 공개되지 않는다.

문 21. GATT의 내국민대우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내국민대우 의무는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ㄴ.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르면, 수입품에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ㄷ. 내국민대우원칙은 수입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ㄹ. 회원국은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높은 내국세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ㄴ, ㄹ

문 22.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개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WTO의 모든 회원국이 수락하는 경우에만 발효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1994년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 ② 1994년 GATT 제2조 관세양허
- ③ 1994년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 ④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 제1항 최혜국대우
- ⑤ WTO설립협정 제9조 의사결정

문 23. <보기1>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보기2>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1>

A국은 B, C, D, E국으로부터 각각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다. A국은 B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40%, C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10%, D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30%, E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A, B, C, D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며 E국은 WTO 회원국이 아니다. 또한 교역되는 자동차는 모두 동종상품(like product)이라 가정한다.]

<보기2>

ㄱ. A국은 현재 WTO의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동 원칙이 적용될 경우 B, C, D, E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모두 10%가 된다.

ㄴ. 만약 A국과 B국이 자동차의 무관세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면, E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모두 무관세가 된다.

ㄷ. A국은 E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일괄적으로 5%로 감축할 수 있다.

ㄹ. A국이 D국과의 자동차 교역에 대하여 최혜국대우에 관한 의무면제(waiver)를 받았더라도, A국은 B국과 C국산 자동차에는 10% 관세를, E국산 자동차에는 2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4.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양해(DSU)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DSU는 WTO 협정 위반의 경우뿐만 아니라 비위반제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② DSU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패널 및 상소절차뿐만 아니라 주선, 조정, 중재, 중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③ DSU에 따르면 패널의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④ DSU에 따르면 DSU 자체는 분쟁해결 대상 협정에 속하지 않는다.
- ⑤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5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문 25.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해석과 협정들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WTO설립협정과 다자간 상품무역협정 간에 저축이 있을 경우 WTO설립협정이 우선한다.
- ② WTO설립협정과 다자간 상품무역협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③ 1994년 GATT의 내용과 다자간 상품무역협정이 저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 ④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설립협정과 다자간 상품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 ⑤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해석에 대한 채택은 총의(consensus)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동법

문 1.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 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ㄷ.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ㄹ.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 노동법의 법원(法源) 및 자치규범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②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④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문 3. 사용자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 ②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의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③ 부당노동행위인 단체교섭거부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 ④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⑤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실제의 경영자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문 4. 노동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에서 A, B,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A)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B)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 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C)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A)	(B)	(C)
①	근로계약	여성	직장점거
②	근로계약	여성	직장폐쇄
③	근로조건	성	직장점거
④	근로조건	여성	직장폐쇄
⑤	근로조건	성	직장폐쇄

문 5. 시용(試用)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용이라 함은 본채용 직전의 일정기간 동안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적 사용을 말한다.
- ②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절하는 기준은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기준보다 넓게 인정된다.
- ③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시용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 시용 중의 근로관계는 일종의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관계이다.

문 6.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의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
- 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ㄷ.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에 채용된 근로자는 변경 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 ㄹ.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7. 전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②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직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직을 하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 8.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장근로는 금지된다.
- ④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문 9.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사용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도 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된다.
- ③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사용자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한다.
- ⑤ 사용자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청구권도 소멸한다.

문 10. 금품청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금품청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청산되어야 할 금품은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경우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⑤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11.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라도 해고의 사유를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
- ②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계약 체결일 당시 양도인과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④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
- ⑤ 부당해고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문 12.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로 옳은 것은?

- 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②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④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로 정하여져 있는 자
- ⑤ 관리·감독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

문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과 관련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 ③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는 파견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14.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조합의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 사항이다.
 ㄴ.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ㄷ.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은 총회이며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ㄹ. 노동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을 규약에 추가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5.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시간 면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 면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구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문 16.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원활한 조정을 위한 경우에도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없다.
-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③ 일반사업의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이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문 17. 사실관계가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사실관계】

- A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노동단체이다.
- B는 A의 구성원인 근로자이고, C는 B의 사용자이다.
- C는 A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B를 해고하였다.

- ㄱ. A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 ㄴ. B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 ㄷ. C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18.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한다.
- ② 불법쟁의행위시 일반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 ④ 쟁의행위가 주체의 면에서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⑤ 직장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문 19.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이 없어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
- ⑤ 재심판정 취소소송 관할법원이 직권으로 구제명령의 긴급이행명령을 할 수 없다.

문 20.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 법인으로 된다.
- ③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노동조합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문 21.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문서에 노동조합 대표자의 서명날인만 있고 회사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그 문서의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②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 ③ 일반적 구속력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 ④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되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 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문 22.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 ②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한다.
- ③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이나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업무상황이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은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문 2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 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향상
- ②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 ③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
- ④ 단체행동권의 보장
- ⑤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

문 24.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 ① 고용창출의 지원
- ②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 ③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④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 ⑤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문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간병급여
- ② 휴업급여
- ③ 장의비
- ④ 구직급여
- ⑤ 장해급여

국제거래법

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 일방이 협약에 따라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자국법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의무가 없다.
- ②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하지만,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 ③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다량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이 초과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때에는 계약대금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청약자가 전화, 텔렉스 그 밖의 동시적 통신수단에 의하여 지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문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
- ②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계약 체결시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도되는 그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 ③ 매도인은 계약 체결후 자신의 영업소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금지급에 대한 부수비용의 증가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매수인은 계약 또는 협약에서 지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 ⑤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총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위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지 않아도 매수인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수리에 의한 부적합의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위반 당사자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였거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였다면 그러한 계약위반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 ③ 매도인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 ④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매수인이 정한 합리적인 부가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를 수령한 매수인은 그 기간 중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에서,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로 본다.
- ㄴ. 계약의 해제는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ㄷ.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 적용된다.
- ㄹ. 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 ㅁ. 당사자는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부작위에 기인하는 한, 상대방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ㄷ, ㄹ
- ④ ㄱ, ㄴ, ㅁ ⑤ ㄴ, ㄹ, ㅁ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승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되나,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 ②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다.
- ③ 연착된 승낙에 대하여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청약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발송하더라도, 전달이 정상적이었던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되었을 상황에서 승낙이 발송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④ 구두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 ⑤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행하여진 응답은 승낙이 된다.

문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의 하자보완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자보완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하자보완의 수락 여부를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하자를 보완할 수 없다.
- ③ 매도인이 인도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그 기일까지 물품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 ④ 매도인이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특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에 의하여 수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감액권을 행사하더라도 매도인에게 물품인도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수리에 의한 부적합의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매도인의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다.
- ㄹ.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ㅁ. 분할이행계약이 아님에도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 인도가 완전하게 또는 계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 ① ㄴ, ㄹ ② ㄷ, ㅁ ③ ㄱ, ㄷ, ㄹ
- ④ ㄱ, ㄹ, ㅁ ⑤ ㄱ, ㄷ, ㄹ, ㅁ

문 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위험의 이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매도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ㄴ.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위험은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 ㄷ. 불특정물의 매매의 경우, 위험은 하인,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물품이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 ㄹ. 운송중인 물품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물품에 관한 위험은 선적서류의 교부와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 ㅁ.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하고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여진 때에 이전한다.

-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의 보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을 지체하여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보관의무를 부담한다.
- ②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보관의무를 부담한다.
- ③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 ④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계약위반에 의하여 각 당사자가 갖게 되는 구제수단도 상실하게 된다.

- ⑤ 매수인에게 물품이 발송된 후,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지고,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목적지에 매도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물품점유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적용상의 해석기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A)은(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B),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C)을(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 | | | | |
|---|-------|-------|-------|
| | (A) | (B) | (C) |
| ① | 의사표시 | 조리 | 진술 |
| ② | 주장 | 교섭 | 후속 행위 |
| ③ | 행위 | 진술 | 의도 |
| ④ | 통지 | 정황 | 지위 |
| ⑤ | 행위 | 교섭 | 후속 행위 |

문 11. 다음 사례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적용된다면 그 결과로서 옳은 것은?

<사례>
매도인 甲이 인도한 물품에 부적합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 乙이 발견하고, 물품수령일로부터 2년 6개월 후에 甲에게 물품이 부적합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甲과 乙의 물품매매계약에는 매수인이 발견한 부적합에 대한 보증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었다.

- ① 乙이 부적합을 발견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적합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합을 주장할 수 없다.
- ② 乙은 협약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지나 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부적합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乙이 甲에 대한 통지에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였다면 부적합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乙은 물품을 인도받은 후, 즉시 검사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합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검사 및 통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계약상의 보증기간에 우선하므로 乙은 부적합을 주장할 수 없다.

문 1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동일 국적의 상인들 간의 매매에도 협약은 적용될 수 있다.
- ② 당사자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지거나 예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그 당사자의 주된 영업소를 영업소로 본다.
- ③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 ④ 당사자가 대금 그 밖의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해함이 없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국제물품매매계약 당사자가 비체약국의 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 협약의 적용은 배제된다.

문 13.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연결방법 중 단계적 연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혼인의 일반적 효력 ② 혼인 중의 친자관계
- ③ 혼인 외의 친자관계 ④ 부양
- ⑤ 유언의 방식

문 14. 다음은 국제사법상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해결과정이다. (A), (B),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안의 검토 → (A) → 국제사법규정의 결정 → (B) → (C) → 외국법의 적용 → 사안의 해결

- | | | |
|-------------|-----------|-----------|
| (A) | (B) | (C) |
| ① 법률관계 성질결정 | 연결점의 확정 | 준거법의 확정 |
| ② 법률관계 성질결정 | 준거법의 확정 | 연결점의 확정 |
| ③ 연결점의 확정 | 법률관계 성질결정 | 준거법의 확정 |
| ④ 연결점의 확정 | 준거법의 확정 | 법률관계 성질결정 |
| ⑤ 준거법의 확정 | 법률관계 성질결정 | 연결점의 확정 |

문 15. 다음 사례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반정의 적용은 없는 것으로 함)

<사례>

- A국 국민인 甲은 B국에 상거소를 두고 생활하던 중, 휴가를 얻어 B국의 인접국인 C국을 여행하다가, C국에서 같은 A국 국민으로서 B국에 상거소를 두고 C국을 여행하던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되자, 대한민국 법원에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교통사고 이후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 사건 교통사고는 C국의 관련법과는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B국의 관련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① 준거법으로 C국법 또는 대한민국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준거법으로 B국법 또는 C국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③ 준거법으로 B국법 또는 대한민국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④ 준거법으로 B국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⑤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 16. 국제사법상 법인의 속인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의 설립무효 원인 ㄴ. 정관 변경의 효력
 ㄷ. 법인의 소송능력 ㄹ. 법인의 소멸 원인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7. 국제사법상 준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위지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의하여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 ② 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때에는 그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준거법은 본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 ④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⑤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방식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문 18. 국제사법 제13조의 행위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람의 행위능력에 관한 준거법은 행위 당시의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ㄴ. 사람의 행위능력에 관한 준거법인 본국법은 연령에 의한 행위능력의 제한 문제에도 적용된다.
 ㄷ. 사람의 행위능력에 관한 준거법인 본국법은 혼인에 의해 성년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에도 적용된다.
 ㄹ. 사람의 행위능력에 관한 준거법인 본국법은 유언에 관한 행위능력에도 적용된다.
 ㅁ. 본국법에 의하여 이미 행위능력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능력이 상실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9.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의 방식이 계약체결 당시의 준거법에 의하여 유효한 경우, 이후에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하더라도 그 방식의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다.
- ②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 ③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 ④ 당사자가 영업활동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도로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도급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추정한다.
- ⑤ 준거법의 선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의 유효성은,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에 국제사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

문 20. 국제사법상 채권의 양도 또는 채무의 인수에 대한 사항 중 준거법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 ① 채무의 인수가능성
- ②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법률관계
- ③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
- ④ 제3자에 대한 채무인수의 효력
- ⑤ 무기명채권 양도의 효력

형사정책

문 21. 일본인 甲(女)과 결혼한 乙(男)은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자이다. 乙의 사업장은 중국에 있으나, 甲과 乙의 상거소지는 대한민국이다. 乙이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甲이 포태하고 있던 태아 丙의 상속능력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준거법은?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반정의 적용은 없는 것으로 함)

- ① 대한민국법 ② 미국법 ③ 프랑스법
- ④ 일본법 ⑤ 중국법

문 22. 국제사법상 물권에 관한 준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제사법은 물권의 준거법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 ②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의 준거법에 의한다.
- ③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박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 ④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운송수단에 관한 준거법에 의한다.
- ⑤ 물권행위의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한다.

문 23. 독일인 甲(女)과 프랑스인 乙(男)은 스위스에서 혼인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며 일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과 乙의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甲에 대해서는 독일법, 乙에 대해서는 프랑스법에 의한다.
- ② 甲과 乙의 혼인의 방식에 관하여는 스위스법에 의할 수 있다.
- ③ 甲과 乙의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 ④ 甲과 乙은 부부재산관계에 관하여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
- ⑤ 甲과 乙이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준거법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법에 의한다.

문 24. 다음 중 어음·수표와 관련하여 지급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① 환어음 인수인의 채무
- ② 수표지급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 ③ 배서에 의한 배서인의 채무
- ④ 환어음의 인수를 어음 금액의 일부에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⑤ 수표 도난의 경우에 행하여야 하는 절차

문 25. 다음의 각 사건을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함에 있어 ()에 들어갈 준거법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반정의 적용은 없는 것으로 함)

(가) 스웨덴인이 선장인 파나마 선박이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영해에서 영국인이 선장인 인도네시아 선박과 충돌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제사법상 그 선박충돌에 대한 책임의 준거법은 (A)이다.

(나) 스웨덴인이 선장인 파나마 선박이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해에서 영국인이 선장인 인도네시아 선박과 충돌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제사법상 그 선박충돌에 대한 책임의 준거법은 (B)이다.

- | | |
|----------|--------|
| (A) | (B) |
| ① 파나마법 | 파나마법 |
| ② 대한민국법 | 스웨덴법 |
| ③ 스웨덴법 | 영국법 |
| ④ 인도네시아법 | 인도네시아법 |
| ⑤ 대한민국법 | 파나마법 |

문 1. 범죄발생원인으로서의 소질과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전학파는 소질과 환경이 모두 범죄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소질이 훨씬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 ② 범죄발생원인으로서 소질의 내용에는 유전, 신체, 빈곤, 가정해체 등이 포함된다.
- ③ 에이커스(Akers)는 범죄발생은 개인의 소질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라고 보고, 노동자계급의 범죄를 적용범죄와 대항범죄로 구분하였다.
- ④ 크리스찬센(Christiansen)은 쌍생아 연구를 통해 유전적 소질이 범죄원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탐구하였다.
- ⑤ 볼드(Vold)는 집단갈등론을 통해 범죄유전인자를 가진 가족 사이의 갈등이 중요한 범죄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문 2.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들을 모두 묶은 것은?

ㄱ. 암수범죄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범죄피해를 보고하게 하는 피해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한다.

ㄴ. 살인, 강간 등의 중범죄는 가해자의 자기보고 방식을 통해서 암수범죄를 쉽게 파악해 낼 수 있다.

ㄷ. 피해자 없는 범죄의 경우 암수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ㄹ. 화이트칼라 범죄는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암수범죄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3.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구조금 지급의 대상범죄는 살인, 폭행, 상해와 같은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범죄 및 절도, 강도와 같은 재산범죄이다.
- ⑤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문 19. 현행법상 수용자의 외부교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②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③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도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는 검열한다.
- ④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⑤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허가한 경우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문 20. 가출 중인 甲(女, 12세)은 자신의 아버지 A가 100만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남자친구 乙(男, 16세)을 시켜 A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乙은 A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그때를 노려 甲은 A의 지갑에서 100만원을 강취하였다. 현행법상 이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을 발견한 A는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②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A의 동의를 받아야만 A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乙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乙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乙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검사가 乙을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⑤ 소년부 판사가 乙에 대하여 심리개시 결정을 한 경우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하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21. 현행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 ① 진술거부권의 고지 ② 검사의 결정 전 조사
- ③ 조건부 기소유예 ④ 국선보조인 선정
- ⑤ 검사의 화해권고

문 22. 소년형사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에 대한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②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 ③ 소년에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④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의 2분의 1이 지나야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문 23.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②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③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를 범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 ⑤ 12세인 사람을 강간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24.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도 소년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원칙은?

- ① 예방주의 ② 과학주의 ③ 당사자주의
- ④ 개별주의 ⑤ 밀행주의

문 25. 현행 소년법에 근거할 때, 소년에 대해 소년부 판사가 할 수 있는 결정으로 옳은 것은?

- ① 10세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
- ② 11세 소년에 대한 장기 소년원 송치
- ③ 12세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 ④ 13세 소년에 대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⑤ 단기 보호관찰 중인 14세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1년 연장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